

이슈브리프 881호
(2026. 8.11)

K-방산의 길: 평화를 위한 자강

제881호

홍건식 hks21c@inss.re.kr
김원식 kimphil@inss.re.kr



국문초록

오늘날 한반도는 냉전의 상흔과 북핵 위협으로 '차가운 평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의 강권정치가 강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생존을 지킬 자강력 확보가 절실하다. 우리의 K-방산은 군사 무기의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넘어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할 기반이 되어 왔다. 우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평화와의 조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주주의와 평화의 염원을 담은 우리의 헌법을 바탕으로 민주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방산수출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비슷한 안보 환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중견국들과 무기 공동개발,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자강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력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완제품 판매에 머물지 않고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인재 양성, 제도 구축을 지원하며 한국이 축적한 산업화·민주화·자주국방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K-방산은 군사적 우위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강력은 평화를 지킬 힘이 되고, 힘을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평화력'은 그 힘의 목적과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두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K-방산은 군사강국을 넘어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키워드: K-방산, K-피스, 자강, 평화, 헌법

K-방산 역량의 급속한 성장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제기되고 있다. 무기 수출 확대와 국방력 강화가 우리 헌법이 명시한 평화 지향성과 충돌할 수 있으며,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질서의 규범이 무너지고 강권정치가 노골화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군사적 자강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절제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차가운 평화’

오늘날 우리는 탈냉전 질서의 종식과 함께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¹⁾ 강대국들이 힘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침략전쟁을 금지해 온 국제법적 규범과 유엔 체제의 실효성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자유 무역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 역시 거대한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한반도에서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냉전적 질서 속에서 ‘차가운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소 간 냉전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종식되었지만, 냉전을 열전으로 만들었던 한국전쟁의 상흔과 분단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쟁은 멈추었지만 평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안보 위협 역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향후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강대국 간 전략 경쟁과 새로운 진영화까지 중첩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질서의

1) 이문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일조각, 2026) 참조.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 간 적대성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증가하면서 우리가 유지해 온 ‘차가운 평화’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국제규범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군사적 역지력을 강화하고 자강을 모색하는 것은 회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무정부적 국제정치 구조에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자강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동맹과 협력을 통해 자강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삼는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은 이러한 노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해외 무기체계의 도입과 면허생산,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 축적은 점차 국내 독자개발 능력으로 이어졌고, K2 소총과 K9 자주포를 거쳐 T-50과 KF-21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무기 국산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해 온 과정이었다. K-방산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과 자강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적 노력의 산물이다.

K-방산이 마주한 파고와 미래

대한민국의 자강력을 뒷받침해 온 K-방산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상무기를 넘어 유도무기와 항공기, 함정 등으로 영역을 다변화하면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성장하고 있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천궁-II, FA-50/T-50, KF-21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 성공은 K-방산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새로운 어려움도 존재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일반적인 상품시장이 아니다. 국가 간 외교·안보관계와 동맹, 국내 정치, 금융지원, 기술이전, 자국 방위산업 보호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정치적 시장이다. 최근 주요 방산사업을 둘러싼 경쟁에서도 기술과 가격뿐 아니라 국가 간 정치적 결속과 자국 방산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방산 강대국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만으로는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출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K-방산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그 길을 대한민국이 지향해 온 ‘평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K-방산의 길을 평화의 실현에서 찾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군사적 자강력과 방산 역량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조건인 동시에 향후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략을 당한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방산 공급망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안보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와 기여는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주국방 능력의 강화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조건에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강력은 북한을 압도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한 힘이 아니라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상과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지향성이 확고하게 전제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방력 강화를 일방적인 대북 군사적 우위와 위협 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자강력이 물리적·군사적 억지력을 의미한다면, ‘평화력’은 평화를 추구하려는 국가적 의지와 헌신, 그리고 그 힘을 외교와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평화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평화력이 자강력의 목적과 사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K-방산과 자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 역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K-방산의 새로운 방향은 평화

이를 위해 K-방산의 새로운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에 기반한 K-방산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시 안보와 평화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K-방산이 우리 군의 수요를 넘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방산수출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산수출의 경제적·안보적 효과뿐 아니라 수입국의 무기 사용 목적과 국제법 준수 여부, 분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요한 방산수출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K-방산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이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방산협력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중견국들과 ‘평화를 위한 자강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강대국 정치와 지정학적 경쟁, 국익 중심의 국제정치가 더욱 심화될수록 글로벌 방산시장 역시 더욱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기존 방산 강대국들과 모든 영역에서 직접 경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유사하게 전략적 자율성과 독자적인 방위 산업 기반을 추구하는 중견국들과 새로운 방산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호주, 튀르키예, 스웨덴 등 다양한 중견국들과 공동 개발·공동생산, 기술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확대하고, 각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평화를 위한 자강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새로운 군사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강대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 각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협력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방산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점차 정치화되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강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K-방산 수출은 장기적으로 무기체계의 판매를 넘어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 자주국방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산업화와 함께 발전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기술을 학습하고 산업적 기반을 구축해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화를 이루었고, 군사력을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문민통제 아래 두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두 가지 경험은 K-방산이 가진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다. 따라서 향후 K-방산 협력은 완제품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생산과 기술협력, 현지 인력양성과 정비체계 구축, 산업생태계 형성, 국방 거버넌스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경험 공유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국가 간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출해야 하는 것은 무기만이 아니라 한 국가가 스스로의 산업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자신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의 ‘자강 경험’ 이어야 한다.

평화력과 자강력의 조화를 위하여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대한민국에 평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역사적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지향성을 전제로 우리는 K-방산과 K-평화, 자강력과 평화력을 아우르는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전적 격언과 “전쟁을 피하려면 평화를 위해 대화하라”는 명제는 모두 일정한 진실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군사력만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면 안보 딜레마와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충분한 억지력과 힘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화 역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강력과 평화력의 조화를 위해서는 먼저 K-방산 역량 강화를 평화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K-방산의 성장은 경제적 이익과 자주국방을 위한 수단을 넘어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질서를 만드는 국가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방산수출의 원칙과 규범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자주국방력 강화가 자율적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동결과 감축,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억지와 긴장완화를 조정하는 가변적이고 선순환적인 안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강과 평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강력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며, 평화력은 그 힘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평화력 없는 자강은 군비경쟁과 대결로 흐를 수 있으며, 자강력 없는 평화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K-방산의 길은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자강을 지원하고,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한 국제적 방산협력을 확대하며, 그 과정에서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K-방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사강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K-방산과 K-피스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평화를 위한 자강과 자강을 통한 평화라는 역동적 조화를 구체화해 나갈 전략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